

US-CHINA WATCHING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US-China Policy Institute
亞洲大 中美政策研究所

2022. 10. 27 <제43호>

'한중관계 30주년과 한중관계 미래 30년 :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제안과 더불어'

이상만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정책 제언

- 윤석열 정부의 대중관계 원칙은 한중 양국이 상호 존중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한·미 관계를 중심축으로 하여 한국의 필요성과 한국의 국익에 따른 양국의 국가이익 교집합(조정: 상호차이 인정)을 찾아 自强·克中·共存의 트릴레마(trilemma)를 풀어가야 함.
-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관계가 양립 불가능하므로 그것을 뛰어넘는 외교적 상상력, 냉정한 관찰, 이성적 판단, 그리고 현실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임.
- 그동안 한국의 대중국 학습효과를 보면 더이상 중국에 대한 wishful thinking은 잊어야 함.
- 향후 未來 30년의 한중관계 모델은 구동존이(求同存異)적 실용외교(國益中心) 단계에서 화이부동(和而不同: 差異認定+相互尊重)적 화친외교로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문제 제기

한중수교 30년이 되는 해에 탄생한 윤석열 정부는 미래 30년의 새로운 한중관계 정립을 재설계해야 하는 전환기에 처해 있음

1. 한중관계 30년 회고

1) 한중관계 역사

1992년의 한중수교는 한국전쟁 이래 40여 년간 단절되었던 한중양국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한 역사적 사건으로 한국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과 등소평의 대외개방노선에 대한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에 가능했음

지난 30년 동안의 한중관계는 동북공정,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그리고 사드배치 갈등을 거치면서 정치 영역에서 냉각된 양국 관계는 아직 회복되지 못했음

- 미국이 추진하는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시도와 함께 한중 산업 구조가 상호보완관계에서 상호경쟁관계로 전환되는 상황
- 중국의 쌍순환 정책과 중간재와 부품 국산화 정책 추진이 맞물리면서 경제 영역에서도 양국 관계가 냉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중수교 30년이 되는 해에 탄생한 윤석열 정부는 미래 30년의 새로운 한중관계 정립을 재설계해야 하는 전환기에 처해 있음

- 한중관계 30년(而立) 시기는 적에서 동지로 진화 발전해 왔고, 향후 도래하는 한중관계 30년(耳順)의 시기는 갈등에서 공존공생으로 진화 발전해야 하는 문명공동체가 되어야 함.
- 현재 한중관계는 가깝지만 친하지 않은 상황(近而不親)에서 원칙을 놓고 싸워야 하겠지만 파국은 방지(鬪而不破)해야 함.
- 지난 한중관계 30년은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상태에서 발전해 왔다면 미래 한중관계 30년은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입장을 상호존중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2) 한중관계 성과

그간의 한중관계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양국 간의 민감한 안보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채 경제와 문화협력을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사드 배치는 이후 안보문제가 한중관계에 전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음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 형성을 통한 정치적 신뢰관계 구축이라는 한중수교의 '희망적 사고' (wishful thinking)가 사라졌음

- 미중무역 전쟁의 여파로 '정경분리' 정책 고수가 어려워지면서 양국 간 정치·안보 분야 이슈가 발생하였을 때, 해결 방법으로 경제적 협력 강화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정치외교적으로 정상회담을 포함한 양국 정부 인사간 다양한 형태의 인적교류가 있어왔지만, 실질적인 정치적 신뢰를 쌓지 못함.
- 경제통상 측면에서 경제협력 우선 정책('구동,' 求同)으로 정치외교안보 분야('존이' 存異) 문제를 전략적으로 회피하면서 '경열정냉' (经热政冷) 상황이 고착화되어 한중 수교 이래 민간 교류,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 경제대국으로서의 리더십,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보여준 리더십, 통일 과정에서의 긍정적 역할 기대 등으로 형성된 우호적 한국의 대중국 이미지가 점차 하락하고 있음.

3) 한중관계 30년 각 정부별 특징

협력기반 구축단계(1992-2002) 시기로 노태우 정부 말기,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기가 이에 해당하며, 한국의 북방외교와 중국의 선린외교 목적이 상호 조응하여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정책 변화가 나타났음

- 소위 '북정남경'의 정경분리, 실리외교, 정전체제 유효 인정 등 한중간의 '구동존이' 현상이 존속하는 단계임.

협력 확대 속 갈등속출단계(2003-2012) 시기로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시기가 이에 해당하며, 미중 갈등 표면화 과정에서 한중관계는 '전략적' 관계로 격상되는 단계라 할 수 있음

협력의 내실화와 갈등의 구조화 혼재 단계(2013-2022)로써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기가 이에 해당하며, 미중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한중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기 전 취약한 관계로 변화되었음

2. 한중 간 장애 문제

한중관계에서는 국가관의 차이와 문화와 문명의 공존 사이에서 한중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나타남

- 중국은 영토중심으로 팽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한국은 민족중심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배타적이고 보수적인 경향을 보임으로서 이러한 한중간의 관점과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적지 않았음.
- 실제 유의해야 하는 점은 한중 양국 간 고대에서부터 냉전시기를 거쳐 현재까지 형성된 대중국 이미지는 신뢰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강했고, 더욱이 양국의 강렬한 민족주의 정서는 양국 갈등의 이슈가 발생하면 어김없이 출현했음.
- 중국의 부상은 상대적으로 서구 패권의 쇠락을 가져왔고, 규범 및 표준경쟁, 산업 및 기술경쟁, 규범과 제도의 창신, 체제의 내구력 경쟁 등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려는 복합 경쟁으로 표출됨.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대한국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 한국으로부터 학습효과는 사라지고 한국에게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판단을 하였음

- 한국 역시 중국을 생산기지, 소비시장으로 보다가 중국의 추격, 기술격차 축소로 경쟁관계가 강화되고 중국의 투자환경 악화, 사드 보복, 미중 갈등으로 과도한 대중의존도를 경계하기 시작하였음.
- 그간 한중 양국은 교역액, 기업 투자액, 상호 방문 횟수, 유학생 수 등 인적 물적 교류와 관련된 지표는 대체로 양호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지표들과는 달리 국민들의 대중 인식은 악화되고 있음.
- 양국 간 교류의 증가에 비례해 2000년 한중 마늘 분쟁, 2002년 한·일 월드컵, 2003년 중국의 동북공정, 2005년 단오절 분쟁, 2010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사건, 2016년 사드 보복, 2019년 코로나 팬데믹,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 등을 통해 한·중 간 마찰과 갈등이 빈발하며 수교 초기의 긍정적인 상호 인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음.

중국이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반복해서 천명하고 있지만, 중국의 장기적 전략목표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출하는 것이라는 광범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중국의 한반도 대전략이나 목적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이 지역동맹으로 발전해 한국이 미국의 중국포위망에 가담하는 것은 결연히 반대하고 있음.
- 역사적으로 중국은 '조공(혜택과 제재)' - '기미(통제와 회유)' - '화친(포용과 관용)' 정책을 이용해 주변국을 자국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자 했음.
- 한미동맹이 없으면 중국이 우리를 무시할 것이고, 중국이 지역 패권을 장악하는 날 우리는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대두되고 있음.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구조적 존재", 한반도 평화의 "보증인" 역할 수행했으나 그 변화 조짐에 주목

- 중국은 정전협정 당사국이고 북핵문제에서 평화적 협상이나 최대 압박 모두 중국의 협력과 적극적 참여가 불가결한 입장임.
- 중국이 글로벌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기존 중국의 대외 '3불정책(不干涉、結伴不結盟、絕對不黨派: 내정불간섭, 비동맹, 앞에 나서지 않음)' 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3. 한중관계 미래 30년 전망과 대책

1) 새로운 안보환경 변화

한국의 위상이 과거와 비교해 크게 달라져 미·중 경쟁의 중요한 앵커(anchor)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미중 간 대국 경쟁에서 한국에 대한 압력과 러브콜이 커지는 것은 한국이 원하던 원하지 않은 Geo+ α (지정학, 지경학, 지문화, 지기술)는 한국이 선택해야 하는 운명이 되고 있음

- 국익에 관한한 미국을 중시하더라도 중국을 경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국익에 맞지 않으므로, 대미일변도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국제질서에 참여해야 하며, 대중정책 또한 국익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임.
- 경험상 중국의 전략으로 볼 때 한국과의 지정학적 공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한국의 미래 기술발전과 경제번영에 대한 확실한 배려가 없다면 미국경사전략이 불가피할 것임.

중국은 한반도를 그 자체로 인식하지 않고 미국의 그림자를 보고 있으며, 미중관계의 틀 속에서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한반도 정책 목표로 평화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표방하고 있고, 시진핑 집권 이래 不戰不亂, 비핵화, 대화와 협상으로 표현이 달라졌고 사드사태 이후에는 여기에 "중국의 안전이익 수호"를 추가하였음.
- 중국의 행동을 보면 중국의 한반도 정책 목표는 북한 정권 유지, 다시 말하면 한반도 현상 유지에 있으며, 한국에 의한 통일에 역행하고 있다고 판단
- 한국은 최근 들어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우리 영해와 영공 침범이 빈번해지면서 중국을 북한 다음의 안보위협국으로 인식하고 있음.

중국은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깝고 싫든 좋든 옆에서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지정학적 운명이고, 이러한 현실 앞에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 전망은 한국 외교에 지속적인 부담이 될 것임

- 중국은 전통적으로 천하의 중심을 자처해 왔고 주변 소국은 속국으로 보는 대국의식이 강고하게 남아있으며, 중국은 한국을 소국(小國), 미국의 앞잡이(馬前卒)로 바라보는 태도에 은연중 이러한 대국의식이 표출되고 있음.
- 한국의 역대 정부와 정치인들은 중국의 실체와 의도에 대해 오만한 까닭에 현실에 기초한 중장기 대중전략 부재하였음.

윤석열 정부는 특히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국가행위에 대한 예측을 통해 미래 30년 한국의 안보환경을 견고하게 구축하는 초석을 놓아야 함

-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국가 핵심이익과 국제사회를 향한 안보구상이 '신형대국관계' 에서 '신형 국제관계' 로 전이되고 이제는 20차 당대회에서 '신국제관계' 를 제시함으로써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 관계가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포지션(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은 요동을 칠 가능성이 매우 큼.
- 윤석열 정부는 중국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주목하고 북한과 사회주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대중국관계에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전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나 핵무장론, 제3국과의 동맹수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필요함

2) 대중 정책의 방향

윤석열 정부의 대중(對中) 관계설정의 큰 틀은 '自強' 과 '克中' 과 '共存' 이 바람직함

- 윤석열 정부는 대등과 존중의 기초 위에 국익을 고려하여 상호 존중의 새로운 한·중 관계를 모색해야 하며, 미래 30년 한중관계는 한·미 관계, 한국의 필요성, 한국의 국익에 기초하여 설정해야 함.
- 한중 '국력격차 확대', '정치체제의 차이', '정책주기의 불일치', '국민정서의 반응' 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대중정책 변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중국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을 분리시키고, 한국과 미국을 분리하거나 적어도 한국이 중립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압력을 극복(克中)하기 위한 우방국들과 다층적 협력 유도하는 길을 택해야 할 것임.
- 한중관계는 기존의 접근법과 관점을 달리해야 하는데, 한국은 '핵심국익' 에 기초한 일관된 메시지를 전파함은 물론 스스로 국력을 증강(자강)시켜 미·중 양국 사이에서 '전략적 공존과 동반이 가능한 화친국가' 로 공진화하는 방향을 찾아야 함. 한중관계 미래 30년은 중국을 향해 '대국답게 행동하라' 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해야 할 것임.

한·중 관계는 동주공제(同舟共濟),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시각으로 재설계가 필요함

- 중국이 한국에 대해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만, 역으로 한국도 중국을 압박할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의 입장에서 계속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독자적인 자강과 공동연대(제3국가, 유럽, 호주 등 중견국)의 협력수단을 생산해야 함.
- 한국은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자유민주 가치 vs. 사회주의 가치) 그리고 '국익' 에 기초한 일관된 메시지와 행동을 전파하며, '과학기술외교' 와 '역사문화외교' 를 강화하여 미·중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예상 가능한 국가' 가 되도록 전력투구해야 할 것임.
- 한중관계를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문제해결이 어렵지만, 역사문화외교의 관점에서 한국은 중국문화와 역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국가이므로 교집합을 찾을 수 있을 것임.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한중 간 인적 네트워크 재구축, 현재 양국 국민 간 표출되고 있는 혐한(嫌韓)과 혐중(嫌中)의 부정적 국민정서 완화, 미중 경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정치경제적 영향의 효율적 관리(CPTTP, IPEF, Chip-4동맹 등), 미중 전략경쟁에서 발생하는 양국 간 안보 갈등의 확대를 방지(한반도 비핵화, THAAD 추가배치, IRBM 한반도 배치 등), 새로운 경제협력의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한중일 FTA, 일대일로, RCEP 등)등을 추진해야 함

정치인이나 언론인 그리고 학자들은 중국 관련 인문학적 소양으로 무장하여 대중국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관계의 관점을 바꾸어야 함

- 중국이 대국을 자처하는 만큼 대국답게 행동하도록 지속적인 담론을 전파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한중 간 자강불식의 유교문명 공동체(역사생활 문화권) 건설을 위한 소통이 활성화 되어야 함.
- 한국은 경우에 따라 중국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강력한 적이 될 수도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와 문화외교를 통해 양국 간의 소프트 파워를 증진해야 하며 그 결과를 우호적으로 활용해야 함.
- 중국의 실체를 연구하는 관련 연구소들도 파편화되어 있고, 체계적인 전문 인력 양성이 부재한 현실이 안타까우며, 중장기적으로 중국 연구자들을 네트워크화한 국가주도의 전문 싱크탱크 설립이 절실함.

발행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발행인 김홍규

편집인 서민혜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울곡관 527-2호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전화 031-219-3861

홈페이지 <http://ucpi.ajou.ac.kr>

US-China Watching은 미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여 최신 현안을 분석하는 자료입니다.